

코리아연구원 특별기획 제46호

## 격동하는 동아시아와 한반도

### 기획 취지

코리아연구원에서는 오마이뉴스와 공동으로 격동하는 동아시아 상황을 진단하고 우리의 나갈 길을 모색하는 특집을 연재할 예정입니다. 지금의 동아시아는 미국과 중국이 G2로 쟁패하는 가운데 일본과 북한이 접근하고 있으며, 한국은 중국과 경제협력관계를 심화시키고 있는 복잡하기만 한 상황입니다.

역사적으로 주변 정세의 변화는 한반도 내부 정세에 큰 충격과 변화를 안겨주었습니다. 한국의 국력은 과거 국제정세의 변화기에 비할 바 없이 성장하였습디다만, 국제정세의 변화에 대응하는 외교능력은 구한말과 다를 바 없을 정도로 무능한 모습입니다.

이에 현재의 국제정세를 조명하고 우리의 나아갈 바를 밝히기 위해서 앞으로 6번에 걸쳐서 기획특집을 진행하고자 합니다.

- [1] 북일관계 개선 전망과 아베의 야망 <박정진, 일본 쓰다주꾸대> (7/28)
- [2] 우크라이나 사태 이후 러시아의 강화되는 극동정책 <윤성학, 고려대> (7/31)
- [3] 중국의 꿈 실현을 위한 중국외교전략과 한국의 대응  
<주장환, 한신대> (8/10)
- [4] 워싱턴이 보는 동북아와 한국보수의 선택 <이정철, 숭실대> (8/14)
- [5] 김정은 체제의 대외정책과 대남정책의 특징과 전망  
<장용훈, 연합뉴스> (8/20)
- [6] 한국, 미국MD 편입인가, KAMD인가? <김준형, 한동대> (8/27)

**KNSI** 새로운 코리아구상을 위한 연구원  
Korea National Strategy Institute

※코리아연구원은 네트워크형 싱크탱크로 정치·외교, 경제·통상, 사회통합분야의 정책대안을 제시합니다. 회비 및 기부금은 공익성기부금으로 인정되어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세상을 바꾸는 생각네트워크, 코리아연구원의 회원 등록을 권합니다.

## 북일관계 개선 전망과 아베의 야망

박정진  
(일본 쓰다주꾸 대학교 교수)

- I. 아베의 방북가능성?
- II. 북일관계, 그 자체가 변화하고 있다
- III. 스톡홀름 합의의 이면
- IV. 납치문제, 재 정의의 가능성
- V. 한국, 편승할 건가 관여할 건가

### I. 아베의 방북가능성?

최근의 북일관계는 우리에게 낯설다. 무엇보다 그 전개가 너무 빠르다. 일본에게 "마음대로 북한하고 이야기 하지마"라고 말할 틈도 없이, 아베 신조 수상의 방북가능성이 거론되었다. 시기적으로 7월 3일 베이징에서 북한이 납치문제 해결을 위한 특별조사위원회 설치를 발표한 이후의 일이다. 하지만 일본에서 아베의 방북은 이미 당연한 수순으로 여기는 분위기였다. 이러한 분위기는 좀 더 앞선 5월 28일 스톡홀름에서 북일 간 합의가 이루어지면서 일찌감치 형성되어 왔다. 한국에서 뒤늦게 아베의 방북 가능성이 특필된 것은, 이 합의가 가지는 의미에 대해 집중하지 않았음을 의미한다.

스톡홀름 합의 당시, 일본 외무성은 "납치문제 해결의 단초를 마련"한 것으로 평가했다. 그런데 실제 합의문의 내용을 보면, 해결의 대상을 ①납치희생자 재발견 및 귀국은 물론, ②북송자 가족 고향방문 및 귀국, ③해방직후 북한잔류 일본인 참배 및 유골반환 문제로 확장하고 있고, 이들 문제의 '포괄적 해결'을 약속하고 있다. 일본에게 반드시 유리한 합의라고 볼 수 없다. 북한이 납치문제외의 복수의 카드를 추가시킴으로서 문제 해결의 단계를 설정하고, 이를 통해 교섭상의 자율성과 시간을 확보하고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합의의 내용을 뒤집어 보면, '납치문제는 이미 해결'되었다는 북한의 기존 입장이 이 시점에서 사실상 철회한 것이 된다. 또한 즉시 귀국 또는 반환을 약속함으로써 진정성을 드러내고 있기도 하다. 일본이 말하는 납치문제 해결의 단초는 이 지점에 숨어 있다. 합의에 임하면서, 북한은 납치희생자의 추가적 공표와 이

들의 귀국을 준비해 놓았을 가능성과, 이 점이 회담이전 접촉과정에서 일본 측에 전달되었을 것임이 손쉽게 읽혀지기 때문이다. 일본 정부가 그 가능성을 인식하지 않고 움직였다고는 보기 어렵다. 이 때 이미 답은 나온 거다.

## II. 북일관계, 그 자체가 변화하고 있다

스톡홀름 합의에 배경에 대해서는 대체로 공통된 해석이 제출되었다. 북한 측의 의도에 대해서는 일본의 대북제재 해제를 통한 경제난의 탈피와 한미일 공조의 약화가 주되게 거론되고 있다. 일본의 경우 아베내각의 국내 지지율 상승이 주된 요인이라는 지적이었다. 여기에는 금번의 북일회담도 일회성이라는 인식이 전제되어 있다. 최근의 베이징 회담 직후에는, 한중 정상회담을 의식해, 북한은 중국을 일본은 한국을 견제하기 위해 접근했다고 해석이 대세를 이루고 있다. 북일관계는 결국 종속변수라는 분석이다.

이러한 습관적 평가는 2002년 평양선언이후 제12차를 마지막으로, 북일 국교정상화 본 회담이 장기간 표류되어 왔던 것과 관련이 있다. 북일관계가 동결상태에서 갑자기 급진전된 것으로 비춰지기 때문이다. 사실 납치문제와 제재해제라는 합의 패키지는 2008년 8월 북일 실무자급 회의에서 이미 합의된 사항이었다. 당시 후쿠다 수상의 퇴임과 더불어 백지화되었지만, 2011년 민주당 정권시절에 재추진의 시도가 있었다. 이 또한 동일본 대지진 이후 추진력을 상실했었다. 스톡홀름 합의는 6년 만의 부활인 셈이다.

그 간 북일 간 본 회담의 의제는 '북일국교정상화를 위한 작업부회(Working group)'에서 논의되어 왔다. 작업부회의 설치와 운영은 6자회담의 합의사항이다. 이는 북일 국교정상화 문제가 '북핵 문제'라는 틀 속에 위치해 있었음을 의미한다. 하지만 이 회의구조는 이미 기능정지 상태에 있다. 반면, 북일 양국은 납치문제를 의제로 2차례의 정상회담을 비롯한 다양한 수준의 공식 회담, 즉 정부 간 회담, 실무자급 회담, 하이레벨회담, 포괄병행회담 등을 전개해 왔다. 스톡홀름 합의 패키지를 부활시키면서는 평양선언 당시의 비공식 접촉루트도 부활시키고 있다. 그리고 베이징 회담 이후에는 양국 간에 핫라인까지 설치하기에 이른다.

물론 납치문제는 북일관계는 물론 6자회담을 교란시켜오기도 했다. 그렇지만 현 시점에서 보면, 납치문제가 있기에 북일 양국은 자신들만의 의제로 만날 이유가 항상적으로 존재하는 것이다. 그리고 납치문제 이상의 것 들이 논의되고 있다. 결국

과거엔 6자회담 등 국제적인 틀 속에서 북일 관계가 움직였지만 지금은 양국 간의 쌍무적인 이유에서 북일 관계가 진행되고 있는 것이다. 적어도 한국정부는 이러한 변화를 인지하지 못하고 있음이 확실하다.

### Ⅲ. 스톡홀름 합의의 이면

북한이 의도하는 것은 일본의 제재 해제가 아니다. 북중교역이 결정적인 파탄에 이르지 않는 한, 제재 해제로 현금을 얻기 위해 굳이 현 시점에서 북한이 일본에 접근할 이유는 없다. 북한의 일본에 대한 경제의존도는 당초부터 교섭의 레버리지가 될 수준의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북한은 이번의 회담을 제13차 국교 정상화를 위한 본회담으로 끌고 가려 한다. 돈 문제에 한정해서 말하면, 북중, 남북교역을 증가하는 대규모 북일 '경제협력'도 이 단계에서나 가능한 이야기이다.

북한의 일본에 대한 전략적 이해관계를 이해하고 있다면, 자연스럽게 부상하는 이면상의 거래가 보인다. 만경봉호 입항재개와 조총련 본부 매각문제가 그 것이다. 만경봉호는 유일한 인적 물적 교류 및 교역의 합법적 루트이자 조총련에 대한 직접지도를 가능하게 하는 소통로이다. 이것이 막혀오면서 김정은 체제가 등장한 후에도, 조총련의장은 평양에 입성하지 못하고 있었다. 이 때문에 북한의 대일접근은 모두 비공식화 되고 있고, 북한의 이러한 비공식적 접근은 일본에서 공작활동으로 비춰진다. 물론 북한의 입장에서는 대일 통일전선 사업이다.

조총련은 대일 통일전선 사업의 거점이기도 하지만, (준) 대일공관으로서의 역할도 수행해 왔다. 북일관계가 정상화에 접근할수록 후자의 역할이 확대된다. 그렇다면 일본에서의 현실은 어떠한가. 얼마 전까지 도쿄의 조총련의 본부건물이 건설업체에 경매처분되어 있었다. 본부건물이 허물어지고 맨션이 지어질 운명이었다. 이 상황을 되돌리지 않는 한 북일관계는 일회성이 될 수밖에 없다.

조총련 본부건물의 매각결정의 중지판결이 내려진 것은 베이징 회담 직전이다. 북한이 선 듯 '만족할 만한' 납치문제 조사위원회의 설치를 일본 측에 제시한 이유는 여기에 있다. 물론 일본정부는 '법치'를 강조하며 총련 본부 매각문제에 대한 관여를 부정하고 있다. 만경봉호의 출항은 전술한 북송자 가족 문제 등의 '포괄적 해결' 속에 이루어질 것이다. 과거 재일동포 북송사업으로 북한으로 이동한 일본인 배우자 등 일본인 국적자는 7000명 가까이 된다. 이들의 방일을 허용하게 되면 도향 문제가 생긴다. 이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만경봉호가 떠오를 수밖에 없다

#### IV. 납치문제, 재 정의의 가능성

한편, 일본의 의도는 의심할 바 없이 납치희생자의 귀환이다. 베이징에서 북일간 회담이 시작한 7월 1일, 일본에서는 집단적 자위권 행사에 대한 내각결정이 셋트를 이루었다. 그리고 3일 합의의 결과는 아베 수상의 입을 통해서 매우 극적으로 연출했다. 여기에는 분명 국내정치가 작동하고 있다. 아베노믹스에 대한 회의론이 비등해지고 있고, 무엇보다 개헌을 둘러싼 정치적 추진력이 약화되고 있다. 돌파가 필요한 상황인 것이다. 여기서 납치문제는 아베 또는 그의 내각에게 유력한 정치적 자산이 된다.

그렇다면 아베는 납치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작정인가? 납치문제에 대한 일본정부의 공식입장은 모든 피해자 귀국, 진상 규명, 납치 실행범의 일본 인도이다. 하지만, 납치문제와 관련해 북한 측이 주장해 온 '8명 사망, 4명 미입국'이 김정일의 유훈이 아닌 것처럼, "모든 납치피해자의 귀국"이라는 문구는 정치적 수사에 불과하다. 정부승인을 기다리고 있는 납치피해자들이 수백 명에 달한다. 납치실행범을 찾아서 일본으로 보낸다는 말은 더더욱 리얼리티가 없다.

결국 현실적인 '납치문제 해결'의 재 정의가 필요하며, 이는 일본 국내의 정치 과정에 의해 이루어질 수밖에 없다. 납치문제 해결의 공식적인 수위를 재조정하는 과정에서 아베 개인의 리더십이 결정적 의미를 가진다. 아베가 이 문제에 가장 강경한 입장이었기에, 역설적으로 그의 리더십은 정당성을 발휘하고 있다. 이에 더해 납치문제 해결을 둘러싼 국내여론의 압박 또한 과거에 비해 현저히 약화된 상태이다. 납치 문제의 여론을 주도하고 있는 가족회와 이들을 지원하는 구출회가 분리됐고, 가족회도 분열됐다.

'납치문제 해결 -> 북일 국교정상화 본회담'이라는 흔한 도식은 더 이상 현실에 부합하지 않는다. 물론 북한이 어떤 성과를 내놓아도 일본 여론은 절대 만족하지 않을 것이다. 일본여론을 납득시키기 위한 조사는 조사결과가 아니라 조사과정에서의 투명성이다. 조사과정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일본의 대표단이 추가적으로 현장에서 직접 검증하는 수밖에 없다. 이것을 하려면 결국 재13차 북일 정상화 본회담이 재개되어야 한다. 북한은 이 점을 보고 있다. 아베가 거기까지 갈지는 두고 볼 일이다.

## V. 한국, 편승할 건가 관여할 건가

북일관계, 앞으로 어떻게 전개될까. 최근의 전개과정을 되돌아 보자. 연초에 적십자 회담이 있었고, 이지마 특사의 방북이 뒤를 이었다. 5월에 국장급 회담이 이뤄졌고 정부 간 회담을 거쳐 7월에 납치 피해자 조사가 개시됐다. 다가올 8월에 미얀마에서 열리는 아세안지역안보포럼(ARF)에서 북-일 외교장관 회담으로 격상될지 주목해야 한다. 그리고 9월이면 납치 피해자 조사결과가 나온다. 이것이 아베의 방북으로 이어진다면, 2002년 평양선언 당시와 완전한 데자뷰를 이룬다.

특히 9월 임시국회를 전후로 미-일 가이드라인을 개정해야 한다. 소비세를 10%로 올리는 문제도 결정해야 한다. 뒤이어 오키나와 선거도 있다. 내년으로 넘겨서는 안 될 문제들이다. 내년에는 통상국회와 지방선거가 기다리고 있다. 모두 아베 정권의 지지율을 떨어뜨릴 요인들이다. 아베내각의 지지율은 집단적 자위권 행사를 내각결정하면서 이미 하향곡선을 그리고 있다. 국면 전환용 카드가 반드시 필요하다. 일본은 9월에 집착할 것이고, 북한도 일본의 이러한 사정을 무시하기 어렵다.

여기에 새로운 변수가 더해졌다. 지난 7월 16일 캐리 국무장관이 전화통화를 통해 기시다 외무상에게 아베 총리가 방북하기 전에 "사전에 충분히 논의"할 것을 주문했다. 미국이 간섭하기 시작한 것이다. 일단 아베가 방북을 추진했다는 점이 미국의 입을 통해 공공연해 진 셈이다. 이로서 전격적인 방북과 납치 피해자의 구출이라는 극적인 퍼포먼스의 효과는 반감될 수밖에 없다. 아베가 대북 접근을 본격화하면서 미국과 긴밀한 논의를 생략했다는 점도 드러났다. 그 만큼 쌍무적인 관계로 돌파할 수 있을 것이라고 자신했던 것이다.

아베가 방북을 접어들 수는 있지만, 미국의 간섭이 있다고 해서 납치문제를 포기하지는 않을 것이다. 미국의 메시지는 납치문제 이상의 것, 즉 북핵문제에 대해서는 여전히 허락받고 이야기하라는 것이다. 곧이어 한국 국장급회담 재개 등 한미일 공조가 가동했다. 뒤늦은 한미일 공조의 가동, 이 자체가 금번 북일관계의 특징이다. 한일관계가 그러한 것처럼, 북일관계도 구조변동 속에 있다는 방증이다. 이러한 변화를 방관하면서, 대립 속에 다가올 한일국교정상화 50주년에 맞이하러, 북일 국교정상화 본회담의 진전을 지켜볼 것인가.

늦었지만 한국에게 기회가 주어진 셈이다. 여러 선택지가 있을 수 있다. 전략적 모호성을 유지하며 미국의 입장에 편승할 수 있고, 미국을 부추겨서 아베의 방북과 북일회담을 유산시키는 것도 생각할 수 있다. 둘 다 쉬운 선택이다. 쉬운 선택을 할 경우, 결과적으로 납치희생자의 귀국을 기다리던 일본여론의 강력한 비난을 받을 거다. 역사문제에 더해, 한일관계에 큰 상처로 남을 수 있다. 북일관계에서 민족공조를 공공연히 주장했던 북한의 거친 욕설도 듣게 될 것이다. 통일준비 이전에, 남북관계의 후퇴를 감수해야 한다.

아베의 야망과 이에 대한 경계가 과대평가로 이어져서는 안 된다. 북핵문제의 이니셔티브를 발휘하기 위해서는 지금부터라도 적극적으로 관여하고, 포괄적으로 접근해야한다. 갑자기 할 일이 너무 많다. 납치문제 해결을 향한 북한과 일본 '양국'의 노력을 지지하는 동시에, 북핵문제에 대해 '전략적 인내'를 고수하고 있는 미국을 설득해야한다. 그리고 일본과 많이 대화해야 한다. 남북관계의 진전도 동시에 추진해야 함은 물론이다. 하지만 여전히 한국의 존재감이 느껴지지 않는다. (2014/07/28)

## 우크라이나 사태 이후 러시아의 강화되는 극동정책

윤성학

(고려대학교 러시아 CIS 연구소 연구교수)

- |   |
|---|
| <p>I. 강화되는 대러시아 제재와<br/>러시아 대외정책 변화</p> <p>II. 러시아의 아시아로의 선회</p> <p>III. 러시아의 대북한 접근과 한반도</p> |
|---|

### I. 강화되는 대러시아 제재와 러시아 대외정책 변화

우크라이나 동부지역에서 말레이시아 항공기 격추 사건을 계기로 미국과 러시아의 긴장관계가 높아지고 있다. 한반도와 극동지역도 그 영향력에 들어갈 가능성이 크다. 오바마는 러시아의 크림반도 합병 이후 외교 실패로 큰 폭의 지지도 하락을 경험하였다. 이제 전세를 역전시키기 위해 총력전에 나서고 있다.

미국과 EU는 이미 러시아의 일부 해외 자산동결과 금융거래에 대한 제재를 가하였지만 이번에는 러시아의 핵심 기업을 중심으로 제재에 착수하고 있다. 극동지역에서 활발하게 자원개발을 진행하는 러시아 국영석유회사인 로스네프티(Rosneft)와 러시아 최대 민영 가스채굴 회사 노바텍(Novatec), 금융권 기업으로는 러시아 대외경제은행, 러시아농업은행, 모스크바은행 등이 포함되어 있다. 이들 기업들은 미국 등 서방 자본시장에 접근이 금지될 뿐만 아니라 북극해 개발과 셰일오일 채굴 기술협력에도 배제될 가능성이 높다.

서방의 경제제재로 러시아는 심각한 경제위기에 빠져들고 있다. 러시아 경제는 크림 합병 이후 이미 지난 3월부터 투자부진과 금융위기로 심각한 경기침체를 겪고 있다. 이번 제재로 경제위기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아졌다. 'EU 옵서버'는 새로운 경제 제재조치로 러시아 경제는 올해 약 31조 원, 내년 약 103조 원의 손실을 볼 것으로 예상하였다. 이것은 러시아 국내총생산(GDP)의 1.5%, 4.8%에 해당하는 규모이다.



심각한 경제 불안과 더불어 러시아의 국가 이미지도 추락하고 있다. 러시아에 대한 비우호적인 국가가 증가하고 있으며 푸틴의 이미지도 악화되고 있다. 러시아는 이미 주요 8개국 정상회의(G8)에서 배척되고 있으며 올해 11월 호주 브리즈번에서 열릴 G20 정상회의에서 푸틴을 배제하는 움직임마저 있다.

미국을 중심으로 하는 서방의 전방위적인 압력에 대해 푸틴은 단호하게 맞서고 있다. 러시아는 역사적으로 외부 세력의 위협에 굴복한 전통이 없다. 나폴레옹과 히틀러도 막강한 화력을 바탕으로 러시아를 침략하였지만 결국 정복하지 못했다. 서방의 계속되는 경제조치는 오히려 러시아 내부의 결속력을 높여주고 푸틴에 대한 지지도를 높여주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푸틴은 미국에 굴복하기보다는 경제적 손실을 감수하더라도 서방과 단호하게 맞설 가능성이 높다.

독일 시사주간 슈피겔은 최근 강화되는 서방의 제재에 대해 러시아 지배세력 간의 갈등이 심화되고 있다고 보도하였다. 시장경제로의 체제전환이후 막대한 부를 쌓아온 신흥재벌 세력은 올리가르히로 불린다. 이 신흥재벌 세력은 서방과의 타협을 요구하고 있다. 반면 푸틴의 전통적인 지지 세력인 실로비키(국가 보안 관료)들은 강경 대응을 요구하며 유럽 대신 중국 등 아시아 국가들간의 협력을 통해 현 상황을 돌파하고자 한다.

실로비키의 정점에 서 있는 푸틴은 절대적인 여론의 지지를 등에 업고 이제 대외정책의 방향을 유럽에서 아시아로 선회하고 있다. 2012년 블라디보스톡 APEC 정상회담에서 푸틴은 러시아가 아태지역으로의 선회(возвращение в АТР)할 것을 선언하였는데 우크라이나 사태는 이러한 정책을 가속화시키고 있다.

## II. 러시아의 아시아로의 선회

러시아의 아시아로의 선회는 서방측의 체제조치와 압박 속에서 국제적 고립을 탈피하고자 하는 전술적 차원의 움직임만은 결코 아니다. 우크라이나 사태 이전 러시아는 수년전부터 이미 유럽 시장의 발전 가능성에 회의를 느끼며 상대적으로 성장 가능성이 높은 아시아를 주목하였다. 지난 몇 년동안 러시아의 대 EU 에너지 자원 수출은 소폭 증가하고 있지만 중국을 비롯한 아시아와의 교역은 크게 증가하고 있다. 중국, 한국, 일본, 인도, 베트남 등은 러시아의 에너지 자원 수출 시장으로 높은 가능성을 갖고 있으며 이 지역의 경제성장 또한 러시

아의 입장에서는 매력적이다.

러시아의 아시아로의 선회는 지난 3월 18일 푸틴이 발표한 새로운 외교 독트린에 잘 나타나고 있다. ‘신푸틴 독트린’의 핵심은 러시아는 더 이상 스스로를 유럽의 일부로 간주하지 않으며 인권이나 민주주의 등 소위 서구식의 보편적인 가치를 신봉하지 않을 것이라는 점이다. 러시아는 지난 20년간 시장경제로의 체제전환을 시도하면서 러시아를 유럽 국가로 자리매김하고자 하였지만 이제 이 노선을 폐기하고 아시아와 유럽을 아우르는 유라시아주의로 회귀하겠다는 구상을 분명히 했다.

러시아의 아시아로의 선회 정책에 가장 핵심적인 국가는 중국이다. 푸틴은 2014년 5월 20일 시진핑과 정상회담을 갖고 국방, 에너지, 교통, 금융 등 49개 부문의 협력문건에 서명함으로써 리중협력을 극대화하였다. 러시아는 2018년부터 새로운 동부선 가스 파이프라인을 통해 연간 380억 m<sup>3</sup>씩 30년에 걸쳐 공급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약 4,000억 달러 규모의 가스협력을 타결하였다. 러시아의 석유기업 로스네프티는 시베리아 스코보로디노를 통해 향후 25년간 3억 6천 5백만 톤의 석유를 중국에 공급하기로 합의했다. 중국에 대한 러시아 에너지 자원의 수출은 시베리아 인프라 전체를 현대화할 수 있다. 이는 향후 50년간 러시아 경제에 중요한 역할을 담당할 것으로 예상된다.

### Ⅲ. 러시아의 대북한 접근과 한반도

러시아는 북한의 핵개발과 장거리 미사일 시험 발사 등에 대해 명백히 반대하지만 최근 북한과의 협력 기반을 착실히 넓혀 나가고 있다. 2013년 9월에는 극동의 핫산에서 나진항에 이르는 54km 구간의 철도를 현대화시키는 공사를 러시아 주도로 완공하였다. 2014년 2월 소치올림픽 개막식에는 북한의 김영남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이 참석하여 푸틴을 면담하기도 했다. 2014년 3월에는 북러 정부간 공동위원회 러시아측 대표를 맡고 있는 갈루쉬카(Aleksandr Galushka) 러시아 극동개발부장관이 평양을 방문하여 현재 1억 1,200만 달러에 머물러 있는 양국간 교역량을 2020년까지 10억 달러까지 끌어올리기로 합의하였다.

2014년 4월에는 러시아 극동연방관구 대통령 전권대표이자 부총리인 트루트네프(Yury Trutnev)가 극동지역의 주지사들을 대동해 평양을 방문하여 소방차

수십 대를 북한에 기증하는 기증식을 가졌다. 북한은 트루트네프 부총리에게 기존부채 탕감 이외에도 신규 차관과 에너지 공급을 포함한 무역거래에 있어서 가격보조와 우대를 요청하였다.

북한이 러시아와의 관계 개선에 적극 나서는 것은 핵개발에 따른 국제적 고립을 탈피하고 중국에 편중된 대외경제관계를 다변화하기 위해서이다. 특히 작년 12월 중국의 후원을 받고 있는 장성택 처형 이후 소원해진 북중관계 또한 북러관계 개선에 한 몫을 했다고 볼 수 있다. 북한은 자신에 대한 최대의 후원자인 중국과의 관계가 소원해진 틈새를 메우기 위해 러시아와의 협력을 강화하고 있다. 북한은 러시아와의 협력을 통해 에너지, 원자재, 식량 등의 공급을 포함하는 경제협력을 강화하고 중국을 견제할 수 있는 카드를 가지고자 하는 것이다.

러시아가 북한과의 관계 개선에 적극 나서고 있는 것은 무엇보다도 극동 지역에서 미국과 중국의 영향력을 견제하고 자국의 존재감을 유지하기 위해서이다. 러시아는 러중 협력이 강화되고 있는 가운데 중국의 영향력 확대를 견제하기 위해 북한과의 관계를 개선함으로써 극동지역에서 중국의 지나친 영향력 확대를 일정 부분 상쇄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한 러시아는 우크라이나 사태로 서방과 국제사회에서 고립이 현실화되자 그 대안 중의 하나로 북한과의 관계를 회복하고자 하는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실제로 러시아는 중국 이민자의 극동 진출을 견제하기 위해 약 5만 명으로 추정되는 북한의 이주노동자를 적극 받아들이고 있으며 북한은 러시아에게만 나진 부두항의 49년 조차권을 인정하고 있다.

그러나 러시아의 대북 접근이 실질적인 성과를 낳기 위해서는 가스관, 철도, 전력망 연결 등 남북러 3각협력이 활성화되어야 한다. 남북러 3각협력에 공을 들이고 있는 러시아로서는 남북한 관계의 개선을 위해 중재자 역할을 자임하면서 남북한이 철도협력 및 가스관 프로젝트 등에 전향적으로 동참할 수 있는 유리한 환경을 마련하려고 할 것이다. 남북러 인프라 건설과 러시아 연해주 지역에서의 자유무역지대의 설치를 통해 러시아는 극동 개발을 본격화할 수 있으며 국제적 고립을 탈피할 수 있다.

우크라이나 사태는 국가간 전략적 변화가 적극 감지되고 있는 극동지역에서 일종의 풍선 효과를 결과하고 있다. 한국의 입장으로는 남북한 관계의 개선과 유라시아 협력을 위한 좋은 기회만 제공하지는 않을 것이다. 미국은 글로벌 차

원에서 러시아 제재를 위해 한국의 대러시아 투자를 주저앉힐 가능성이 높다. 최근 남북관계 개선의 유일한 돌파구인 러시아 주도의 나진항 개발사업도 위기에 빠질 수 있는 것이다. 미국의 대러 제재조치로 인해 한국은 러시아와의 새로운 협력 프로젝트를 펼쳐 나가는 데 제약을 받을 수 있다. 한국이 지금처럼 소극적이고 대미의존적인 자세로 극동 지역 변화에 대응한다면 유라시아 이니셔티브라는 한국정부의 주요 대외정책 노선은 심각한 장애에 직면하게 될 것이며, 나아가 통일대박이라는 비전은 구호로만 거칠 가능성이 높다. (2014/07/31)

## 중국의 꿈 실현을 위한 중국외교전략과 한국의 대응

주장환  
(한신대 중국지역학과 교수)

- I. 시진핑의 ‘중국의 꿈’ 구상
- II. 중국의 신형대국론과 미국의 대응
- III. 경제력을 바탕으로 한 중국의 동아시아 외교
- IV. 한국의 대중 전략

### I. 시진핑의 ‘중국의 꿈’ 구상

중국의 한반도 정책의 기조가 변화하고 있다는 주장이 있다. 여러 가지 측면에서 협력의 여지가 많고 또 의지가 있는 한국과의 관계는 ‘강화’되고, 북핵 문제와 경제 협력 등 여러 측면에서 도무지 말을 듣지 않고 있는 북한과의 관계는 ‘소원’해지고 있다는 것이다.

실제로 2014년 들어 중국이 북한에 대한 원유 수출이 제로 상태이고, 지난해 7월 이후 고위급 인사의 방문도 전무하다. 반대로 시진핑이 최고 지도자가 된 2012년 이후 한중간 경제 및 사회 교류는 여전히 확대추세이다. 두나라 정상은 2013년과 2014년 각각 상대방 국가를 방문하여 양국 관계의 발전에 합의했다.

냉전 시기 이래 일관되게 유지되어온 중국의 ‘친북용남’ 즉 북한과의 관계를 우선시 하고, 한국을 상황에 따라 이용한다는 기조가 변화한 것인가? 아니면 기존 기조가 지속되는 것을 전제로 한 일종의 한시적 일탈인가? 중국의 속내가 궁금해진다.

이를 파악하기 위해서 우선 중국의 현재 인식을 이해하는 것이 필요하다. 기실 현 중국의 최고 지도자 시진핑은 집권 초기 이른바 ‘중국의 꿈’이라는 연설을 통해 이를 명확히 밝혔다. 이 연설의 의미는 두 가지이다.

첫째는 중국의 꿈의 내용이다. 한마디로 중국의 꿈은 ‘부흥’이다. 사전적인 의미로써 부흥이란 쇠퇴했던 것이 다시 일어난다는 뜻이다. 중국인들의 기억 속에서 1840년 아편 전쟁 이전의 중국은 세계 최강대국이었다. 그 이후 쇠락의 길을 걸었고, 어떻게 하면 부흥할 것인가가 중국의 근현대사의 주요 화두였다. 1949년 사회주의의 길로 부흥을 꾀할 것을 결정했다.

그 이후 슬한 곡절이 있었으나, 1978년 개혁개방 정책을 채택하면서 본격적인 부흥의 길을 걸어오고 있다. 이것은 중국인들에게는 매우 상식적이지 않지 않은 역사 인식이다. 그러나 2012년 이를 최고 지도자가 재차 확인한 것은 대내외적으로 중국은 1840년 이후의 굴욕을 잊지 않고 있고, 그동안의 성과로 말미암아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예전의 찬란했던 세계 최강대국으로서의 영광과 위세를 되찾을 것이라라는 것을 공표한 것이다.

둘째는 이 부흥의 구체적인 시간표의 제출이다. 이 연설에서 시진핑은 이 부흥을 중화인민공화국 건국 100주년 즉 2049년에 완성할 것이며, 중국 공산당 창당 100주년 즉 2021년에는 1인당 국민소득 1만 달러 수준의 중진국에 도달할 것이라고 밝히고 있다.

이는 2021년에는 개혁개방 정책의 목표인 현대화를 달성하는 것을 의미하며, 이른바 사회주의 초급 단계가 종결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동시에 지역 수준에서의 강대국이 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더 나아가 2049년에는 마침내 중국이 세계 최강대국이 된다는 것을 뜻한다. 부흥의 완성이다. 이 시간표의 제출로 인해 중국의 꿈은 더욱 더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과제로 정식화되었다.

## II. 중국의 신형대국론과 미국의 대응

자, 이것이 현재 중국의 인식이다. 이 연설의 가장 중요한 의의는 솔직하고 구체적으로 중국의 의도를 나타냈다. 예전 필자는 이를 무협지에 비유한 적이 있다.

([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1834671](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1834671))

과거 무림의 절대 강자였던 중국이 내상을 입고 동굴에서 요양을 끝내고 세상에 다시 나온다는 것을 공포했다. 동시에 현재 무림의 각 세력에게 자신의 계획 즉 다시금 절대 강자의 위치에 오를 시간표를 공개하며 대비할 것을 당부하고 있다.

한편 이런 인식은 국제 관계에 대해서도 투영되고 있다. 우선 21세기 국제질서의 양대 축인 미국과의 관계에 대한 중국의 입장이다. 이 두 나라 관계의 본질은 여전히 서로를 인정하나 신뢰하지 못하는 동상이몽이다. 그러나 시진핑 집권 이후 달라진 것은 앞서 지적했듯이 중국의 달라진 태도이다.

현재 중국은 미국과의 관계에서 신형대국론을 주장하고 있다. 이 주장의 요지는 두 가지이다. 하나는 ‘신형’이라는 것은 역사적으로 강대국들간에 존재했던 갈등과 마찰을 주로 하는 관계가 아닌 협력적 관계를 만들자는 것이다. 구체적으로 상호 ‘핵심이익’에 대한 존중을 요구하고 있다. 또 그동안 타친으로 거론되던 잠재적 패권국으로서의 지위를 이제는 중국 스스로도 인정하고 있다. 이에 걸 맞는 책임과 역할을 다하겠다는 입장이다.

이 주장에 대해 미국은 기본적으로 후자의 주장에 대해서만 긍정하고 있는 상황이다. 왜냐하면 상호 핵심 이익에 대한 존중은 자칫하면 중국의 세력과 역량의 확대를 방조하는 결과를 낳을 수 있기 때문이다. 더 본질적으로 미국은 여전히 자국이 주도하고 구축해놓은 현하의 국제질서와 규범을 중국이 순순히 따를 것으로 보지 않는다는 것이다.

중요한 것은 이런 미국에 대해 중국은 개혁개방으로 확보한 정치·경제적 자신감으로 ‘해보려면 해 보라’고 하고 있다. 바로 이런 양국 관계의 발현이 미국과 중국의 각각 아시아로의 회귀 정책과 서진전략, TPP(환태평양동반자협정)와 RCEP(역내 포괄적 경제동반자협정)의 대립 그리고 센카쿠(조어도)와 남중국해 영유권 분쟁 등이다. 이런 연유로 중국의 외교 정책 기조가 공세화되었다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다.

그러나 중국의 입장에서 보면, 먼저 선방을 날린 것은 미국이라고 여긴다. 역시 예전 필자의 비유에 따르면, 중국은 현재 무림의 절대 강자 미국의 견제와 자극으로 인해 스스로가 정한 시간 보다 빨리 동굴 문을 깨고 나온 상황이다. 이런 맥락에서 향후 미중관계에 긴장감이 흐를 것이 예상된다.

### Ⅲ. 경제력을 바탕으로 한 중국의 동아시아 외교

다음으로 동아시아에 대한 인식이다. 이 대목이 왜 중요한가하면 역사적으로 최강대국의 부상은 해당 지역에서부터 출발했으며, 현실적으로도 현재 이 지역을 두고 봉쇄하고자 하는 미국과 이를 뚫고자 하는 중국 사이의 갈등이 제일 첨예하게 분출되고 있기 때문이다. 중국의 입장에서 동아시아는 주변 지역으로써 그 전략적 중요성이 매우 높다.

그동안 중국은 이 지역에서 한편으로는 경제적 영향력을 확대시킴과 동시에 최대한 우호적인 태도로 지역 국가들의 경계심을 완화시키는 데 초점을 맞춰왔다. 동굴에서 요양 중이던 중국의 입장에서 주변이 시끄럽지 않는 것이 최선의 상황이었다. 그러나 최근에 들어와서는, 미중관계의 변화가 규정하는 바가 크겠지만, 이들 국가와 갈등과 마찰의 발생을 의도적으로 인내하고 있지 않고 있다.

문제는 외교안보 분야와 달리, 경제 분야에서의 역내 국가의 중국에 대한 의존도의 제고는 이미 거스를 수 없는 추세라는 점이다. 이를 바탕으로 중국은 매우 적극적으로 동아시아 지역 질서를 새롭게 구축해 나갈 것으로 보인다.

한편 중국은 지역 강대국으로서의 지위 확보라는 목표를 2021년까지 달성하려 하는 바, 시기적으로 그리 많은 시간이 남지 않았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이 시기적 특성도 최근의 중국의 다소 급진적인 행태를 설명하는 중요한 요인이 된다 하겠다. 더 나아가 향후 이 과정에서 보다 분명한 편 가르기가 진행될 가능성이 높다. 이를 위한 당근과 채찍이 동시에 사용될 전망이다. 동굴에서 나온 과거 무림의 절대 고수는 한편으로는 예전 자신이 거느리고 있던 세력을 다시 규합하여 할 것이고, 다른 한편으로는 예상보다 빨리 나온 탓에 충분히 회복되지 않은 자신의 역량을 주변을 튼튼히 함으로써 이를 보충하려 할 것이기 때문이다.

이렇게 봤을 때 중국의 대 한반도 정책 기조는 분명해진다. 기본적으로 한반도는 동아시아의 일부이다. 따라서 위의 동아시아에 대한 책략과 그 본질은 다르지 않을 것이다. 여기서 본질은 한반도에서 최대한 중국의 영향력을 확대시켜서 패권적 지위를 가진 지역 강대국이 되겠다는 것이다. 이는 일반적인 국가가 가지는 다른 국가에 대한 목표일뿐만 아니라, 현재 국제 및 지역 질서의 재편을 추진하고 있는 중국에게는 더욱 중요하게 부각된다. 즉 이 과정에서 최대한 우



균을 많이 확보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나 그 행태의 측면에는 과거에는 우호를 상대적으로 더욱 강조했다면, 지금은 필요하다면 갈등 발생도 불사한다는 것으로 바뀌었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중국의 최근 북한에 대한 다소 감정적인 행태는 자국의 이해에 부합되지 않는 행동에 대해서는 매우 공세적인 조치도 취할 수 있다는 인식의 변화를 반영한다 하겠다. 특히 북한이 중국의 영향력을 벗어나려는 시도를 취했을 때는 더욱 악화된 북중관계를 예상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이것이 최근의 냉각된 북중 관계를 설명할 수 있는 중요한 요인이라 하겠다.

기실 중국의 이런 행태는 북한뿐만 아니라 최근에 분쟁을 겪고 있는 동아시아의 다른 국가들에게도 나타나는 것이다. 그러나 논리적으로 보면, 별다른 외교적 대안이 없는 북한에게 중국과의 관계 악화는 매우 심각한 위협으로 받아들일 수 있다. 이렇게 보면 북한이 러시아, 일본 등과 적극적인 관계를 맺으려 하는 것이 이해가 된다.

한편 한국은 중국에게 매우 대하기 어려운 존재이다. 한미 동맹이 지속되는 한, 획기적인 관계의 발전과 심화는 불가능하다고 판단하고 있다. 즉 한미와 한중관계는 제로섬 게임이라는 의미이다. 그러나 그동안의 성과(?)로 경제적 차원에서의 의존도는 급속도로 심화되어 왔다. 더구나 경제적 요인과 일본이라는 역내 다른 국가와의 관계 요인 등으로 인해 명시적이고 직접적인 갈등은 양국이 서로 회피하고 있다. 따라서 별로 기대하지는 않지만, 중국 입장에서는 보다 심화된 관계 구축을 위해 노력할 필요는 있다. 또 한국이 결정적으로 중국에 반기를 드는 행동을 제약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책략들을 추진할 가능성이 높다.

다시금 강호 제패를 공표하고, 동굴을 문을 나온 과거 무림의 고수에게 당연히 자발적으로 자신의 충실한 우군이 되어주는 이가 고맙겠지만, 아니라면 최대 견인, 최소 고립무력화시키는 전술을 펼 가능성이 높아질 것이다. 따라서 개혁 개방기 중국의 대 한반도 정책의 핵심인 한반도에서의 평화와 안정의 유지, 한반도 비핵화 추구, 대화와 협상 중시 등의 입장이 달라질 가능성도 존재한다. 실제로 이 입장들은 시기에 따라 미묘하게 그 우선 순위가 달라져왔다. 그러나 향후 우선 순위를 넘어 이 입장들 자체에 변화가 나타날 가능성도 존재한다. 그 방향은 다소 갈등이 있더라도 한반도에서의 영향력 제고를 보다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것이 될 전망이다.

#### IV. 한국의 대중 전략

국면이 변했다. 중국이 동굴 문을 스스로 깨고 나왔다. 이것은 외교안보적으로 미국에 경도되어 있으나 경제적으로 중국에게 의존도가 높은 한국에게 일반적인 의미에서의 국제질서의 재편 이상의 수준이다. ‘중국의 꿈’은 우리 예상보다 훨씬 더 급속하게 선택이 강요될 수도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렇게 봤을 때 향후 중국의 대 한반도 정책 기조는 친북용남에서 변화될 가능성이 높다. 그러나 그 구체적인 방향은 한국과 북한의 대응에 따라 달라질 것이다.

이런 맥락에서 우리에게 시간이 많지 않다. 보다 적극적이고, 공세적인 중국의 등장이라는 현실 앞에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이 재편의 과정에서 우리 스스로도 ‘혁신’하는 것이다. 그 혁신의 첫 걸음은 매우 상식적이게도 지나치게 국제화되어 있는 한반도 문제를 한반도화하는 것이다. 이것이 불확실한 국제 및 지역 정세에서 취할 수 있는 한국의 가장 현실적이면서도 현명한 선택이다.

이 전제하에서, 공세적인 행태가 가져오는 부작용 즉 주변 국가들로부터 고립의 위협을 감내해야하는 중국에게 더 많은 이득을 챙길 수 있는 다양한 방안을 고민할 수 있을 것이다. 국제 질서의 재편은 부상하는 강대국 인근의 약소국에게는 대부분 위기이지만, 기회로 전환될 수도 있음을 분명히 인식하자. (2014/08/10)

## 워싱턴이 보는 동북아와 한국보수의 선택

이정철  
(숭실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 I. 아시아중시(Pivot to Asia),  
중국발(rebalancing China)인가  
일본발(Pivot to Japan)인가?
- II. 대북정책: 전략적 인내에 담긴  
워싱턴관료들의 오기
- III. 6자회담을 둘러싼 논쟁 :  
접촉(Talk) vs. 협상(Negotiation)  
그리고 대화(Discussion)
- IV. 아베의 아이러니와 대북관여정책의 새 옵션:  
한-미-중 vs 한-미-일
- V. 동북아 새 지정학과 역사논쟁의 의의

### I. 아시아중시(Pivot to Asia), 중국발(rebalancing China)인가 일본발(Pivot to Japan)인가?

자신의 회고록(Hard Choice)에서 힐러리 전 장관은 아시아중시정책(Pivot to Asia)이 아시아의 미래 가치를 중시한 자신의 직관에 의한 것이라며, 회고록의 상당 부분을 아시아와 중국에 할당하고 있다. 그에 따르면 아시아중시정책은 두가지 의미를 지니고 있는데, 하나는 중국의 부상(China Rise)으로 인한 아시아의 불균형(imbalance)을 수정하기 위한 재균형(rebalance)이라는 측면이고 다른 한편으로 동남아시아의 전략적 지위상승에 따른 미국의 국가이익의 장기적투사(deployment)라는 측면을 반영하고 있다.

그러나 미국의 아시아중시정책은 유럽이나 중동 그리고 우크라이나와 같은 전통적 우선순위를 지닌 미국 대외정책의 지정학적 선호에 일대 혼란을 가져온 레토릭일 뿐이라는 비난이 비등해졌다. 지난 연말 시퀘스트 사태로 APEC 회담에 오마바가 불참하자 이 같은 비판은 더욱 거세졌고, 미국의 아시아중시정책에 의거해 중국과

의 영해분쟁에 나서려던 동남아의 몇 개국들은 닭 쫓던 개라는 비아냥을 감수하지 않을 수 없었다. 이 과정에서 필리핀은 중국과 화해할 수 없는 길에 들어섰고 결국 20년 전 내몰았던 미군기지를 수빅만에 다시 불러들이는 협정을 체결하는데까지 이르렀다.

지금에 와서 돌아보면 아시아회귀정책은, 중국에 대한 견제를 국익의 최우선적 과제로 삼아 21세기 국가개조에 나서고 있는 일본 우익의 신전략에 정당성을 부여하는 것 외에 다른 역할을 한 것이 별로 없다. 지난 4월 일본을 국민 방문한 오바마 대통령이 직접 조어도(센카쿠열도)에 대한 미일방위조약 5조의 적용을 공인해 줌으로써 일본의 손을 들어주고, 뒤이어 아베가 일본헌법 9조 재해석에 의한 집단 자위권 공식화라는 수순을 밟게 됨에 따라 미국의 재균형 정책이 중국발인지 일본 발인지 알 수 없는 상황에까지 이르게 되었다.

부시 행정부 시절의 크리스토프 힐(C. Hill) 동아태차관보의 정책행보를 재앙이라고 보는 시각이 워싱턴의 동아태전문가들 사이에 팽배해있는데, 그 표면적인 이유는 6자회담의 실패에 연유하고 있다. 그러나 그 속내를 들여다보면 힐 차관보가 중국과 북한과의 협상을 중심으로 동아태 전략을 가져갔기 때문과 그 결과 전형적인 일본 무시(Japan Passing) 현상에 일조했기 때문이라는 것이 정론이다. 한국에서는 그가 새 정부에서도 계속 역할하기를 기대했지만, 커트 캠벨(Curt Campbell) 전 동아태차관보 등 전형적인 일본중시정책에 입각해 아시아정책을 입안한 힐러리 팀에 그가 남아있기란 사실상 불가능한 바램이었던 것이다. 공화당 정부였던 부시 정부에 이어 오바마 정부 하에서도 백악관, 행정부관료들의 일본경시는 여전히 심각하다.

## II. 대북정책: 전략적 인내에 담긴 워싱턴관료들의 오기

부시 행정부 시절 입안된 대북정책의 원칙 중의 하나는 노 레드라인(No Red Line) 정책이었다. 이 정책은 미국이 레드라인을 제시하는 순간 북한이 그것을 의도적으로 침범함으로써 미국으로 하여금 북한과 충돌이나 협상이나 라는 양자택일식의 선택의 상황에 놓이게 강제하는 것이 북한의 전술 즉 벼랑 끝 전술이라는 판단 하에서 수립되었다. 즉 북한이 어떤 도발로 공세를 퍼던 간에 미국은 레드라인을 제시하지 않음으로 해서 북한과 원하지 않는 협상에 말려들지 않겠다는 의지의 표현이었다. 1:1 협상을 피하는 대신 그 대안으로 다자체제를 형성하고 특히 중국의 대북영향력을 활용해 북한을 관리하는(outsourcing) 정책이 선택되었다. 6자회

담의 초기버전은 이처럼 미국이 북한을 압박하는 유용한 대북압박공간이었다.

그러나 이 같은 6자회담의 틀은 북한이 핵실험을 강행함에 따라 무너져 내리게 된다. 노 레드라인 정책이 무너지고 결국 양자협상의 길로 들어섰기 때문이다. 이때 부터 시작된 크리스토프 힐 차관보의 활약(?)은 미국이 애초에 원했던 6자회담의 프레임을 벗어나기 시작했고 6자회담은 대북압박공간이라기 보다는 사실상의 다자체제로 전환해가기 시작했다. 미국과 일본의 안보통들이 좋아할 리 만무했다.

오바마 행정부팀이 입안한 전략적 인내(실제 오바마 행정부의 동아태팀들은 이 용어를 정식대북정책이라는 주장을 부인하고 있다)는 사실상 부시 행정부 시절의 노 레드라인 정책의 진화로 볼 수 밖에 없다. 자기 임기 내 2차례의 핵실험과 수백발의 미사일 발사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정녕 협상을 거부하고 있는 오바마팀이야말로 진정 노 레드라인 정책의 진수를 보여주고 있다는 비아냥이 미국의회에서 들리기 시작했다. 지난 7월 말 제네바 합의 20주년 관련해 벌어진 하원청문회에서 의원들이 전략적 인내를 비판하자 대북협상대사인 데이비스(G. Davies)가 전략적 비인내(strategic Impatience)라고 답하는 해프닝이 벌어진 이유이기도 하다.

오바마 행정부의 대북정책은 국무부의 대니얼 러셀(D. Russel) 동아태차관보와 백악관의 사일러(S. Seiler) 한반도 담당관 등이 주도하고 있다. 그러나 이들의 대북정책은 부시 행정부 시절의 마이클 그린(M. Green)이나 빅터 차(V. Cha) 등과 같은 6자회담 주역들의 시각과 노선을 그대로 견지하고 있다. 그들로부터 전수된 학습효과는 북한정권에 대한 강압외교와 군사적 억지 그리고 일방주의적 제재라는 3박자에 투철하다.

중국과의 재균형 정책 하에서의 긴장관계에서는 6자회담이라는 다자주의 틀이 더 이상 대북압박에 효과적이지 못하다고 판단하기 때문에, 이들에게 6자회담은 더 이상 유용한 대북프레임이 되지 못한다. 그들이 6자회담에선 듯 나서지 않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 III. 6자회담을 둘러싼 논쟁

#### : 접촉(Talk) vs. 협상(Negotiation) 그리고 대화(Discussion)

부시 행정부 초기, 북한과 협상(negotiation)은 없고 단지 접촉(talk)만 있을 뿐이라는 원칙은 지금도 백악관의 중요한 논리이다. 전략적 인내에 대한 비판 앞에

북한과 대화를 거부하지 않는다는(Not no talk) 방어논리는 비판을 피해가기에는 그럴듯하나 해법과는 멀어보인다.

오바마 정부의 비확산담당특보를 지낸 아이혼(R. Einhorn)은 최근 National Interest지에 북한과 탐색적 대화(Exploratory Discussion)가 필요하다는 글을 발표하였다. 백악관, 국무부 대북담당팀들은 아이혼의 제안을 애써 무시하고 있지만, 워싱턴 코리아워쳐들 사이에서는 진중하기로 소문난 아이혼의 글에 의미를 부여하는 분위기이다. ‘미국에 북한은 없다’고들 하지만(중앙일보 8월 12일 칼럼) 이에 대해서는 양론이 있다.

국무부, 백악관 관료들만 바라보면, 그리고 그들이 전권을 쥐고 있는 한 ‘미국에 북한은 없’지만 아이혼의 제안처럼 협상의 필요성은 여전하다. 그리고 그 필요성은 관료의 장벽(gatekeeper)을 넘어 직접 케리 국무장관에게 전달되고 있는 듯하다. 그 동안 중동협상에 집착하던 케리 장관이 중간선거 이후 대북협상에서 외교적성과를 내기 위한 제스처가 있을지 모른다는 것이다.

실제 북한문제를 더 이상 무시하기에는 상황이 만만치 않다. 우크라이나 사태에 이어, 시리아-이라크 사태 그리고 아프칸 상황은 오바마에게 역대 최악체 대통령이 라는 인식을 주었다. 여기에 북한의 4차 핵실험마저 더해진다면 오바마 행정부로서는 상상도 하기 싫은 상황이 전개될 것이다.

전통 관료들의 입장에서야 대통령의 외교적 치적보다는 자신들의 행동관행이나 업무상 형성된 승부욕(anti-north korea rivalry)이 중심이겠지만, 고위급 정치인의 경우에는 이와 다른 정책동기가 있게 마련이다. 이 때문에 임명 초기 동아태차관보직에 대북강경파인(중앙일보 8월 12일자동일칼럼) 러셀 현 동아태차관보 대신에 다른 인물을 선호하던 케리가 러셀차관보를 어떻게 설득하여 대북협상을 직접 관할할 것인가에 관심이 집중된다. 오랫동안 의회에서 활동한 케리 장관을 돕는 라인들이 곳곳에서 움직이는 징후도 없지는 않으나 이들이 움직이기에는 계기나 환경이 중요할 것이다. 물론 시간도 그리 길지 않다.

#### IV. 아베의 아이러니와 대북관여정책의 새 옵션: 한-미-중 vs 한-미-일

아베 총리의 대북협상은 이 점에서 백악관-국무부 강경파들의 뒤통수를 친 일대사건이었다. 지난 10년 북한에 대해 누구보다 강경했던 일본과 호흡을 맞추어 오

던 이들 관료집단들로서는 아베 수상의 이 같은 행보 때문에 자신들의 대북강경책이 곤혹스러워졌기 때문이었다.

그러나 생각해보면 동북아의 새로운 지정학은 미국에게 그리 나쁜 게 아닐지도 모른다. 한국이 중국을 견인하여 북한을 압박하기 위해 중국과의 접촉을 늘리자 중국이 이에 호응하여 한국을 한미일 동맹에서 이완시키고자 나서고 있다. 대북압박의 명분을 갖고 진행되는 긴밀한 한중협력상황에 대해 미국이 내놓고 반대하기는 어렵다. 이런 상황에서 미국이 중국을 통해 북한을 관리하는 외주전략과 한-미-중 3자협력에 의한 대북정책을 지속하기란 쉽지 않다.

그렇다면 차라리 그들의 동맹국인 일본이 정상국가화의 과정에서 북한과의 평화적 관계를 모색한다면, 따라서 일본 외주론은 미국에게 또 다른 카드로 검토할 만하다. 즉 한-미-일 3자협력에 의한 대북정책의 모색이다.

물론 일본의 집단자위권을 정당화하며 동시에 한일관계를 강화하려는 미국에게 북한카드가 의외로 유용할 수 있기 위해서는 박근혜 대통령의 ‘통일대박론’이 화학적 촉매제가 되어야 한다. 즉 박근혜 대통령이 남북관계를 적극 주도하고 나선다면 그리고 이를 아베가 측면지원 한다면, 오바마 대통령도 과거처럼 한국정부나 일본 정부에게 속도조절론을 내세울 일은 없다는 일각의 평가는 이 점에서 음미해 볼 만하다.

아베의 평양행에 앞서거나 뒤서거나 남북회담이 이루어진다면 이런 상황에서 미국이 대북협상을 마다하기는 어려울 듯하다. 9월 유엔총회에서의 한일정상회담을 독려하는 미국으로서는 이런 뜻밖의 카드를 검토해 볼 만할 지도 모른다. 이 같은 지정학적 전략은 중간선거에서 상원의 과반수를 공화당이 가지느냐 민주당이 수성하느냐 하는 선거공학과는 결이 다른 문제이다.

## V. 동북아 새 지정학과 역사논쟁의 의의

중국의 부상(Assertive China)과 일본의 정상국가화 그리고 미국의 재균형 정책이라는 전략적 환경 하에서 한반도는 중국 경제의 낙수 효과와 미국이 보장하는 안보 그리고 서구적 민주주의라는 가치 사이에서 고민(alignment)하고 있다.

물론 전통적으로 미국적 가치에 입각한 민주주의론을 선택해 온 한국 보수의 방향은 분명하다. 그리고 이에 대한 기대치의 한계도 분명하다. 문제는 이 같은 전략적 방향을 새로운 환경 하에서 어떤 방식으로 풀어가는가 하는 외교적 방법론에 있다.

중국 공산당과 일본 보수가 펼쳐가는 신지정학의 험로에서 한국 보수의 민족주의가 어떤 지혜로운 선택을 할 것인가? 나약한 외교로 전후 가장 위험스러운(dangerous) 세계를 만들어 놓았다고, 외교는 없고 국내 정책만 있으며 그래서 1920년 이래 최초의 고립주의(isolationist) 정책에 의거한 대통령이라고 비판받는, 심지어는 티파티 세력으로부터 사회주의자라고 비난받는 오바마 대통령에 대해 한국이 어떤 동맹정책을 전개해 가는가? 한국호의 미래가 담긴 질문이다. 과거 어느 시기보다도 한국의 선택이 미국을 끌여가기에 좋은 상황이라는 점은 분명하다. 박근혜 대통령의 결단에 한국 그리고 남북관계 나아가 한반도의 미래가 달려있다는 점이다.

워싱턴은 한국이 더 이상 고래 싸움에 등 터지는 새우가 아니라, 지구적(Going global) 역할을 하는 돌고래가 되라고 요구하고 있다. 정상국가가 된 일본과 한국과의 전략적 협력에 대한 기대는 더 높다. 일본과의 역사 논쟁(memory wars)을 구획화 시켜 정치 안보상의 국익 계산과는 다른 차원에서 다루라고 한다(compartmentalization of priority). 그리고 이런 국익을 위해 과거가 아니라 미래를 바라보라고 한다.

그러나 역사는 구획화되고 감금될 수 있는 과거가 아니다. 역사는 죽은 과거가 아니라 살아있는 생물이다. 그래서 과거를 배우고 현재를 재단하고 바로 그 역사에 기반해 미래를 전망하는 것이다. 일본과의 치열한 역사논쟁이야말로 일본을 제대로 정상국가화 시켜주는 길이고 그것이 동북아가 평화롭게 굴기하는 길이다. 그것을 미국이 이해하게 하는 과정에서 남북협력의 길을 제시하고 한일 협력의 길로 나아가 갈 때, 거기에 한국이 주도하는 동북아의 평화와 번영이 있다. (2014/08/14)



## 돌파구 모색을 위해 화전양면전략을 구사하는 김정은 체제

장용훈  
(연합뉴스 기자)

- I. 북한의 화전양면전략
- II. 북러관계 - 최초로 외국군대 주둔으로 발전
- III. 격동하는 동북아 질서에 대한 북하노이 대응

### I. 북한의 화전양면전략

'화전양면전략'. 최근 북한의 대외적 태도에 대해 자주 등장하는 언론식 표현이다. 하지만 화전양면전략은 모든 정상국가들이 지향하는 대외정책의 기본 기조다.

국민의 정부의 대북정책 추진기조는 '확고한 안보태세를 유지하면서 교류와 협력을 통해 남북관계를 발전시켜 나간다'는 것이었다. 박근혜 대통령도 취임사에서 "국민의 생명과 대한민국의 안전을 위협하는 그 어떤 행위도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며 "확실한 억지력을 바탕으로 남북 간에 신뢰를 쌓기 위해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겠다"고 밝혔다. 대북억지에 기초한 안보태세를 튼튼히 갖추면서 대화와 교류를 통한 신뢰의 구축을 강조하고 있다. 전쟁과 대화 모두에 대비한다는 '화전양면정책'인 셈이다.

김정은 체제 들어 북한의 대외정책도 이런 기본 원칙에 굉장히 충실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2011년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사망 이후 2012년 각종 공직을 승계한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은 작년 김정은 체제의 대외노선을 공식적으로 밝혔다. 2013년 3월30일 노동당 중앙위원회 전원회의를 통해 경제와 핵무력 건설 병진노선을 채택했다. 핵보유국임을 공식적으로 밝혀온 북한이 핵무기에 대한 개발을 확대하고 운반수단인 로켓 개발에도 더 박차를 가하겠다고 공식화했다.

북한 입장에서는 불가피한 선택으로 보인다. 이미 남쪽과 재래식 무기 경쟁에서 열세를 뒤집기 어려운 상황에서 북한은 전략무기 개발을 통해 이같은 비대칭적 상

황을 일거에 대칭적 구조로 바꾸고 싶을 것이기 때문이다. 여기에다 전차와 군함, 전투기 등 재래식 병력을 키우기에 막대한 경제적 비용이 들어갈 수밖에 없는 상황까지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 경제개발이 필요한 상황에서 군사비용을 최소화하고 이를 경제 쪽으로 돌리려고 할 수 있다는 것이다.

북한이 병진노선을 천명한 이후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을 통해 "핵강국이 되면 강력한 전쟁억제력에 기초하여 경제건설에 자금과 노력을 총집중함으로써 비약적 발전을 이룩할 수 있다"고 주장한 것도 이런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다.

## II. 북러관계 - 최초로 외국군대 주둔으로 발전

안보적 측면에서 핵무기 등 전략무기 개발을 통해 위협을 해소하면서도 외교적으로는 현재의 고립적 상황을 탈피하기 위한 노력을 이어가고 있다. 김정은 체제 들어서면서 처한 국제적 환경은 엄혹하다. 북한의 장거리 로켓 발사와 제3차 핵실험에 대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제재결의가 이어졌다. 또 영원한 혈맹으로 믿었던 중국도 시진핑 체제 들어서면서 국제사회의 일반적인 대북압박 노선에 동참하는 모양새다. 박근혜 정부는 핵문제 우선 해결 전략이라는 이명박 정부의 프레임을 그대로 이어가는 대북정책을 취하는 상황이다.

김정은 체제로서는 국제적 환경이라는 구조적 상황의 변화를 모색하기 위한 외교정책을 취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이러한 외교정책은 일단 러시아와 일본을 향하는 모양새다. 전통적 혈맹인 중국과 관계가 소원해진 상황에서 우크라이나 사태로 '동진정책'의 필요성이 제기되는 러시아는 북한이 추파를 던질만한 대상이다.

러시아는 최근 블라디보스토크에서 열린 북한과 '정부 간 통상경제·과학기술협력위원회' 회의에서 대대적인 양국 경제협력에 합의했다. 우선 북한이 무역대금을 러시아 통화인 루블화로 결제하고 러시아가 북한 내 지하자원 개발 사업에 참여키로 했다. 또 러시아의 석유화학기업 '타이프'는 북한에 주유소망을 구축하는 사업에 관심을 표명했으며 일부 러시아 기업들은 금광 등 북한 지하자원 개발 사업에 눈독을 들였다.

심지어 북러 양측이 러시아가 나진항에 드나드는 대형선박의 안전 확보를 위해 러시아 보조함대를 나진항에 주둔시키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는 이야기까지 나온다. 보조함대가 군함인지는 불확실하지만, 북한이 외국군의 주둔을 허용하는 것은

이례적인 일이다.

러시아와 더불어 중국이 꺾끄러워하는 몽골과 관계 개선에도 속도를 내고 있다. 차히야 엘벡도르지 몽골 대통령이 작년 11월 방북해 김일성대학에서 강연하며 "인민은 자유로운 삶을 열망하며 이는 영원한 힘"이라며 "어떤 폭정도 영원히 지속할 수 없다"고 역설했다.

또 강원도의 목초지인 세포등관 개발을 비롯하여 농업, 목축업에서 공동협력을 위한 것으로 여겨지는 '조선·몽골 친선공동회사' 설립에 합의했으며 몽골의 정유회사 '에이치비오일'(HBOil)이 북한 내륙에서 유전을 탐사할 준비까지 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몽골은 나진항을 이용해 석탄을 동해로 실어내는 물류사업에도 큰 관심을 보이고 있다는 후문이다.

### Ⅲ. 6자회담을 둘러싼 논쟁

#### : 접촉(Talk) vs. 협상(Negotiation) 그리고 대화(Discussion)

일본도 북한 김정은 체제가 국제적 환경 변화를 위해 공을 들이는 대상이다. 아베 정부는 영토문제와 과거사 문제로 한국, 중국과 최악의 갈등을 빚는 상황에서 동북아시아라는 역내 영향력의 끈을 유지할 수 있는 채널로 북한을 선택할 수 있다. 북한으로서는 일본과 관계 개선을 통해 한미일 3각 공조의 틀을 깨면서 일본의 경제적 지원을 끌어낼 수 있다는 이점이 있다. 북일 양측의 이해가 서로의 관계 개선을 통해 맞아떨어지는 셈이다.

두 나라의 외교적 발걸음은 여느 때보다 분주하다. 북한은 지난달 4일 특별조사 위원회를 조직해 모든 일본인에 관한 포괄적 조사를 개시했고 이 위원회에는 국방 위원회와 국가안전보위부, 인민보안부 등 권력기구들이 망라됐다. 일본도 북한의 위원회 구성시점에 맞춰 독자 제재 일부를 해제했고 8월에는 돗토리(鳥取)현 사카 이미나토(境港)시의 나카무라 가쓰지(中村勝治) 시장이 라선시를 방문하기도 했다. 중국과 미국의 압박에 맞서 러시아와 일본이라는 카드를 꺼내들면서 남쪽에는 대화를 촉구하고 있는 것이다.

북한은 올해 김정은 제1위원장이 신년사에서 "북남 사이 관계개선을 위한 분위기를 마련해야 한다"며 "남조선 당국은 북남관계 개선으로 나와야 한다"고 촉구했다. 북한은 이 신년사 이후 국방위원회 중대제안(1.16), 남북 적십자 실무접촉(2.5),

고위급회담(2.12), 이산가족상봉(2.20~25), 국방위원회 특별제안(6.30)까지 화해 메시지를 잇달아 전달했다.

북한은 지난달 7일 발표한 정부 성명에서 "북남관계 개선과 조국통일의 새로운 전환의 시대를 열어나가려는 것은 우리 공화국 정부의 확고한 의지"라고도 했다. 특히 북한은 인천에서 열리는 아시안게임에 대규모 선수단과 응원단을 보내겠다는 뜻도 피력해 놓은 상황이다.

북한의 이러한 태도는 변화하는 동북아 질서 속에서 남북간의 대화의 계기를 마련해 한반도 상황을 자신들이 원하는 구도로 변화시킬 수 있다는 자신감을 가진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정부 성명에서 "미국의 패권주의적인 대아시아전략으로 새로운 냉전구도가 형성되고 있는 동북아시아의 지역정세를 복잡다단하다"고 주변 정세를 언급한 것도 이런 분석을 뒷받침한다.

이처럼 북한 김정은 정권의 대외안보정책은 분명 김정일 체제의 그것과 차이가 있어 보인다. 기존의 구조를 벗어나기 위한 길을 향해 일관된 움직임을 보인다. 지속적인 핵 개발에 대해 굳이 숨기지 않으면서 중국의 대미친화적인 움직임에 불만을 노골적으로 표출하고 러시아와 일본 등 다양한 대상을 향해 공세적인 외교에 나선다. 김정은 체제의 달라진 외교안보전략과 행태는 우리에게 김정일 체제 때와는 다른 방식의 외교적 접근을 요구하는 것은 아닐까. 고민이 필요한 시점이다. (2014/08/20)

## 한국, 미국MD 편입인가?, KAMD인가?

김준형  
(한동대학교 교수)

- I. 미국MD vs. KAMD
- II. ‘따로’ 또 ‘같이’ 모두 문제다
- III. 누구를 위한 방어인가?
- IV. MD 방어가 한국의 선택지

### I. 미국MD vs. KAMD

MD 즉 미사일방어체계는 날아오는 미사일을 미사일로 격추시키는 요격시스템이다. 미국이 가장 위협적으로 생각하는 대륙간 탄도미사일은 발사 후 최대 고도 5백Km이상 포물선을 그리며 대기권을 벗어났다가 재진입하며 목표지점으로 떨어지는데, 추진/상승단계, 중간비행단계, 종말낙하단계의 3단계로 나뉜다. 단계별로 요격방법이 다양하게 마련되는데, 비행고도에 따라 하층, 중층, 상층방어로 나뉜다. 하층(10~30km)방어는 주로 패트리어트 미사일이 사용되고, 중층방어(30~150km)는 고고도미사일요격체계 사드(THAAD)로, 상층방어(150~500km)는 SM-3 미사일이 주력 무기다.

MD체제는 고난도 기술과 천문학적 예산이 요구되기 때문에 미국에서도 논란을 끊이지 않는다. 또 방어체계라고 하지만 완성하게 되면 러시아나 중국이 대미억지력을 상실하기 때문에 균형에 의한 상호억지체제가 무너지게 된다. 경쟁국들은 당연히 위협으로 느낄 수밖에 없기에 대비책 마련에 나서면 무한군비경쟁의 위험이 커진다. 또 최근에는 중국의 부상과 미국의 상대적 침체가 맞물리면서 비용절감과 지리적 이점확보를 위해 미국이 동맹국 참여를 추진함으로써 또 다른 논란이 초래되었다. 현재 공식참여국은 영국, 호주, 일본 이탈리아, 체코, 덴마크 정도인데, 미국은 가능한 확장시키려고 하고 있으며, 한국의 참여여부는 뜨거운 감자다.

한국정부는 국내외 논란을 의식해 극구 부인해왔다. 하지만 공식적인 부인에도 불구하고 한미양국정부의 행보는 오히려 편입에 대한 의혹을 초래해왔다. 특히 북한 핵과 미사일 위협에 대한 방어로 KAMD를 들고 나온 것은 의혹을 해소하기보

다 오히려 키우고 있다. KAMD는 북한의 탄도미사일 공격으로부터 수도권 등 인구 밀집지역과 공군기지, 지휘통제시설, 원전 등 전략시설을 보호하기 위해 한국형 미사일방어체제를 구축한다는 것이다. 논란이 벌어질 때 마다 정부는 하층방어만 하는 KAMD와 태평양을 넘어가는 대륙간탄도탄을 요격하는 미국의 MD는 별개라고 강하게 주장해왔다. 그런데 이런 정부의 입장을 신뢰하기 어려운 상황들이 전개되고 있다.

## II. ‘따로’ 또 ‘같이’ 모두 문제다

먼저 KAMD 자체의 효용가치를 따로 떼어 분석해보자. KAMD는 킬체인과 짝을 이뤄 북한의 미사일발사 징후를 포착해 이를 30분 내에 탐지한 다음 선제타격하고, 이를 피해 발사된 미사일들이 날아오면 KAMD로 공중에서 요격하겠다는 구상이다. 언뜻 듣기에는 북한위협을 확실하게 무력화시킬 수 있을 것 같지만, 성능 대비 비용이 너무 크다. 군 추산으로도 2022년까지 15조2천억을 애기하는데, 훨씬 더 막대한 비용이 들어갈 것이라는 예상이 많다.

비용문제와 함께 정확성 문제도 대두된다. 현재 미국의 기술로도 3단계 중에 그나마 성공률이 높은 것은 중간비행단계이다. 고도의 급격한 변화가 적고 비행시간도 20~30분이기 때문이다. 반면에 다른 두 단계는 정확도가 낮고 실패 시 위험부담이 크다. 그런데 KAMD는 비행시간은 고작 3~4분대에 불과해서 효과가 매우 의심되는 이런 단계에서 요격하겠다는 것이다. 그래서 킬체인의 동반구축을 내세우는데, 신뢰도가 보장되지 않는 선부른 선제타격론은 한반도의 전쟁가능성만 높인다. 더욱이 북한이 핵과 미사일 전력을 강화시키고 있지만, 여전히 주력타격수단은 장사정포, 단거리미사일, 다연장 로켓포들이다. 수십조를 들여서 구축하게 될 KAMD로는 요격이 불가능한 무기들이다.

이렇게 KAMD를 따로 떼어 자체로만 평가해도 분명 결함을 지니고 있는데, 더 큰 우려는 미국MD체제의 편입여부에 있다. 정부는 미국MD 참여에 대한 세간의 의혹에 대해 일관되게 부인해왔다. 미국MD와 KAMD는 목표와 범위 그리고 성능 등 모든 면에서 다르다는 것과, 한미정부간에 편입에 관한 공식협약이 없었다는 것이다. 미국MD의 주목적은 중국이나 러시아에서 미국으로 날아오는 사거리 5500km 이상의 대륙간 탄도미사일을 요격하기 위한 것인데, KAMD는 북한의 사거리 1000~1300Km 이하의 스커드 위주의 중단거리 미사일 방어용이므로 다르다는 주장이다. 미국이 한국의 MD 참여를 압박하고 있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미국 고

위관리들의 사건을 언론이 과장하고, 일부 시민단체들이 왜곡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정부의 이런 해명은 오히려 신뢰를 떨어뜨리고 의구심은 증폭시킨다. 우선 정부는 미국과 MD를 공식적으로 협의한 적이 없다고 말하지만 사실과 다르다. 한국의 미국MD 참여라는 의제를 놓고 공개적으로 벌인 협상은 없었으나 양국 고위급 회담들에서 주요 관심사로 꾸준히 논의되어왔다. 더욱이 그러한 협의를 전후해 미국에서 나온 언급들은 결코 과장이거나 사건이라고 할 수 없다.

### Ⅲ. 누구를 위한 방어인가?

정부의 부인에도 불구하고 한국의 미국 MD참여 문제는 이명박정부 임기 초부터 진행되었다는 정황증거들이 있다. 위키리크스의 폭로문건에 따르면 2008년에 이미 한미양국이 MD에 관한 합동연구프로그램을 진행했다. 폭로문건은 논외로 치더라도 2010년 7월에 양국해군이 해상MD훈련을 실시했으며, 2011년에 미국은 내부적으로 한국을 MD 참여국으로 분류했다. 다만 미국이 한국 국내여론과 중국의 반발을 고려해서 은밀히 진행되었으며, 미국MD 참여라는 표현은 어떻게든 피하려 노력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 중 하나가 2012년 6월 한미국방외교장관 2+2회담에서 나온 ‘포괄적 연합방어태세’라는 용어다. 여기서 ‘연합’은 MD에 대한 한미 일체화를 의미하며, ‘포괄적’이라는 것은 한국방어를 넘어 일본과 괌을 포함한 동북아 지역방어를 의미한다. KAMD 역시 이런 맥락에서 바라보면 실제로는 미국MD와의 연계성을 확보하면서도 국내의 반발을 최소화하려는 목적이 있음을 부인하기 어렵다.

KAMD가 정부말대로 현재 미국MD와는 다른 차원이라고 해도 한국의 기술로는 독자개발과 운영이 불가능하다. 미국의 조기경보 지원이나, 관련 무기구입, 지휘체계의 도움 없이 불가능하다는 점에서 실질적으로 미국의 체제에 편입될 수밖에 없다. 앞으로 국산화율을 높이겠다지만, 첨단정보력과 첨단무기체계 운영은 미국이 담당할 채 한국은 완제품 무기만 구입하는 지금까지의 한미동맹 구도자체가 바뀌지 않는 한 현실성이 적다. 게다가 전작권도 미국이 계속 유지하게 된 현실이다.

물론 아직은 한국이 정식으로 미국 MD에 참여하고 있다고 할 공식적인 증거는 없다. 그러나 이는 거꾸로 뒤집어보면 양국이 과장을 고려하여 조심스럽고 비밀스럽게, 그리고 점진적으로 일을 진행하고 있다는 방증으로 해석될 수 있다. 결국 공식적으로는 부인하되, 실제로는 착착 계산된 수순대로 진행되고 있다는 의심이 들

수밖에 없다. 천문학적 소요비용은 물론이고 한반도에 긴장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사안이 국민적 합의 없이 추진되고 결정될 개연성이 점점 커지고 있다.

한국의 MD참여를 부인하는 또 다른 근거로 사용되는 미국이 한국의 MD참여를 필요로 하지 않는다는 것도 사실과 동떨어져있다. 미국은 지난 십여 년 동안 주한 미군을 동북아지역 방어군으로 전환하려는 소위 ‘전략적 유연성’ 실현을 위해 노력해왔고, 여기에 MD구축은 핵심이다. MD는 아시아재균형 정책에서도 핵심사항인데, 이를 위해 미국은 한미일 3각 군사협력을 강하게 원하고 있다. 이와 같은 사실들은 지난 1년간 오바마와 척 헤이글, 그리고 합참의장과 한미연합사령관의 반복적인 언급으로 확인되고 있다.

작년 5월 한미정상회담 기자회견에서 오바마가 북한미사일 위협에 대해 포괄적이고 상호운용이 가능한 연합방위력을 지속적으로 강화하는데 합의했다는 식으로 슬그머니 한국의 MD참여를 시사했었다. 또 10월 방한했던 헤이글 국방장관이 전작권 반환을 위해 한국군이 갖춰야 할 역량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으로 미사일방어력이라면서 두 문제를 직접적으로 연관 지었다. 그리고 올해 4월 한미정상회담에서 박대통령이 직접 상호운용성을 높이겠다고 언급했으며, 공동기자회견에서 오바마가 양국이 MD에 투자하고 있으며, 양국군의 공동운용을 가능하게 하고 있다고 말했다. 지난 1년간 모종의 합의에 의한 일정한 흐름을 가지고 진행되어왔다는 추론이 가능한 부분이다.

오바마가 돌아간 이후 미국 고위관리들의 발언은 더 과감해졌다. 윈필드 미 합참의장이 사드의 한국배치를 검토하고 있다고 했으며, 월스트리트저널은 부지선정에 들어갔다고까지 보도했다. 더욱이 스캐퍼로티 한미연합사령관 겸 주한미군사령관은 6월3일 사드의 한국 배치를 워싱턴에 요청한 사실이 있다고 밝혔다. 이달 21일에는 로버트 위크 국방부부장은 미국의 사드와 KAMD가 완벽하게 상호운용성을 갖추는 것을 원한다고 했다. 의회의 움직임도 적극적이다. 미국하원이 통과시킨 2015년 국방수권법은 국방장관으로 하여금 한미일 미사일협력강화방안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고 이를 6개월 내에 하원군사위에 보고하라고 요구하고 있다.

#### IV. MD 방어가 한국의 선택지

일련의 전개과정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하는 것은 미국의 공세적 행보에 비해 한국의 대미외교는 너무도 수동적이라는 부분이다. MD는 말할 것도 없고 무기판매나



원자력협정, 주둔분담금 등에도 발언권이 별로 없었다. 일본의 집단자위권에 대한 미국의 지지과정에서도 마찬가지였다. 전작권 환수연기와 MD참여의 교환빅딜설이 나오는 이유다. 더욱이 하층방어에만 집중한다던 한국정부의 언술에도 최근 변화가 감지된다. 한민구 국방장관은 주한미군을 통한 사드의 배치를 기정사실화하면서 우리안보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했다. KAMD로 하층방어만 하겠다고 했다가 이제는 북한이 중거리미사일의 발사각을 높임으로써 고도를 높여 공격할 수도 있으니 사드가 필요하다는 상식적으로 이해하기 어려운 논리를 펴고 있다. 블룸버그통신은 지난 6월4일 미국방부 미사일 방어정책국장인 드비아소가 한국정부가 사드의 성능과 가격에 대한 정보를 요청했었다는 말을 인용 보도했고, 한국 국방부는 이를 시인했다. 미국 MD체제의 핵심인 사드의 한국배치를 시도하려는 미국을 측면 지원하는 것으로 들린다. 주한미군을 통한 배치는 괜찮은가? 만약에 사드가 한국에 배치된다면 그것은 미국 땅 이외에서는 세계 최초가 된다. 가장 적극적인 MD파트너인 영국과 일본에도 없다. 그리고 미국에서는 주한미군이 보유하고 있다가 한국에게 이양하는 방안까지 이미 거론되고 있다.

지적한대로 독자적인 KAMD의 개발 자체도 비용대비 효과를 생각하면 너무도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다. 그런데다 미국MD에 편입된다면 이것은 현 한반도 및 동북아상황을 고려하면 치명적인 오판이 될 수 있다. 북한으로서는 더욱더 핵무기와 미사일전력 강화에 나설 것이고, 이동성을 증가시키며 더 정교한 은폐에 노력할 것이다. 또한 중국과의 관계를 악화시켜 한국은 미중대결과 중일패권경쟁의 선봉에 나서게 되는 것은 불을 보듯 뻔하다. 중국입장에서 보면 한국이 중국으로부터 막대한 무역이익을 보면서, 자신을 봉쇄하려는 미일과 군사협력에 참여하는 것이다. 중국은 사드의 한국배치가 북한이 아니라 자신을 겨냥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다. 사드체제의 핵심인 X-Band 레이더는 약 5천km를 샅샅이 탐지할 수는 성능을 갖고 있기에 특별히 긴장하고 있는 것이다. 한국이 미국MD에 참여할 경우 한중관계가 희생될 것이라며 여러 경로를 통하여 경고하는 이유다.

반복하지만 한국의 미국MD 참여를 ‘공식적으로’ 합의한 바는 없다. 한국정부는 부인하고, 미국도 공식적으로는 그 선 안에서 움직인다. 그러나 실제로는 백악관, 의회, 국방부가 돌아가면서 한국의 참여를 기정사실화 또는 압박하고 있는 모양새다. 한국은 국내여론과 중국의 눈치를 보면서도 이미 한발 이상 걸치고 있는 듯 보인다. 북한의 미사일에 대한 방어보다 미국의 MD참여 압박을 막아내는 ‘MD 방어’가 더 시급해 보인다. 아니면 이미 방어선이 뚫렸는데 국민만 모르는 것인가? 정말 그렇다면 정부는 하루빨리 투명하게 공개하고 국민의 뜻을 제대로 물어야 할 것이다. (2014/08/27)